

## 국제 ODA 동향

(2007. 10)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 ODA 토픽

[Page]

- [중국 등 세계 각국의 對 아프리카 진출 동향 및 시사점](#) [2]
  - ◆ 중국 및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동향 및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ODA의 對 아프리카 지원방향을 모색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ADB의 이주정책 및 시사점](#) [14]
  - ◆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ADB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주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 ODA 단신

- [EDCF 설립 20주년 국제 컨퍼런스 개최](#) [27]
  - ◆ 2007년 7월 개최된 EDCF 설립 20주년 국제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JBIC, FY2007 1사분기\(4~6월\) 업무실적 발표](#) [31]
  - ◆ JBIC이 2007년 7월에 발표한 FY2007 1사분기의 주요 업무실적
- [일본의 구속성 차관\(STEP\) 지원 동향](#) [34]
  - ◆ 일본의 구속성 차관 지원에 관한 최근 동향 정리

### ODA 자료

- [2006년도 우리나라 ODA 통계\(확정치\)의 주요 내용](#) [36]
  - ◆ 2007년 10월 OECD DAC 앞으로 통보된 우리나라 ODA 통계(확정치)에 대한 분석 자료

### EDCF 소식

- [2007년 3/4분기 EDCF 소식](#) [44]
  - ◆ 2007년 3/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및 2007년 9월 말 현재 EDCF 업무통계

ODA 토픽 1

## 중국 등 세계 각국의 對 아프리카 진출 동향 및 시사점

### 【요약】

- 아프리카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동향 및 세계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ODA의 대 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I.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동향

#### □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1차적으로 자원개발과 관련이 있음

- 중국의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수입액은 2005년 기준 120억 달러 규모 (전체 원유수입액의 30%)로, 과거 최대 수입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아프리카가 제 1의 수입선이 됨
  - 동 규모는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원유수입액의 약 1.5배에 해당
- 또한,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수입 비중은 2025년까지 45%로 확대될 전망

#### □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1990년대 후반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2006년에는 270억 달러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수출규모는 2000년대 초반 영국과 미국을 추월하여 현재 프랑스에 이어 제 2의 수출국으로 부상

####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는 2005년 말 기준 11.8억 달러에 육박하며, 800여 개의 기업이 아프리카 총 53개국 중 49개 국가에 진출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 추이(억 달러) : 4.9('03년) → 9.0('04년) → 11.8('05년)

## II.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 특징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천연자원 확보 등 경제적·전략적인 목적이 강해짐

### 1. 대대적인 개발원조를 통한 지원

- 원조의 조화 및 연계, 수원국 거버넌스 향상 등의 통상적인 국제적 원조규범을 제대로 고려치 않은 채,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펴붓고 있음
- 1975년 완공된 1,800km의 탄자니아~잠비아 철도건설공사 지원규모는 4.5억 달러
- 정부청사건물, 대통령 궁, 국민광장, 주택, 발전소, 고속도로 및 교량, 직업훈련, 의료지원, 인력 초청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지원
- 이러한 무차별적인 개발원조 지원은 이른 바 '베이징 컨센서스1)'에 기초한 무조건성에 기초를 두고, 아프리카 수원국들로 하여금 하나의 중국 (One China) 원칙을 받아들이고 대만과의 단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 정치적·이념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방문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

-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개발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1)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하의 시장경제를 일컫는 말. 정치적 자유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는 중국식 발전 국가 모델. 2004년 골드만 삭스의 고문이며 중국 칭화대 겸직교수인 쥔슈아 쿠퍼 라모가 처음 개념화 함. 일부 학자는 중국이 최근 30여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을 3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도국들에게 동 모델을 제시해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결합한 '위싱턴 컨센서스'보다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06년 한 해에만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모두 16개국을 방문
- 2006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는 아프리카 53개국 중 48개국 정상이 대거 참석
- 중국 외교부는 2006년을 '아프리카의 해'로 명명한 바 있으며, 2007년 초에도 후진타오 주석은 아프리카 8개국을 순방

### 3. '하드 파워' 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확산

- 군사력, 경제력 등의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방송 등의 비물질적인 소프트 파워 확산을 통한 아프리카 접근 강화
  - 아프리카의 주요국 대학 내에 공자연구소(Confucius Institute) 설립 추진 등

### 4. 저가상품 공세로 아프리카 시장침투 가속화

- 최북단 알제리에서 최남단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상품의 범람
- 영국과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 아프리카에 대한 제 2의 수출국으로 부상
-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1990년대 후반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2006년에는 270억 달러, 2010년경에는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Ⅲ. 세계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접근 전략

### 1. 유 럽

- 유럽은 아프리카의 식민종주국으로 경제·개발협력에 대한 접근방식과 영향력에 있어서 최근에 등장한 중국·일본·인도 등 타 국가들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음
- 아프리카와 맺은 오랜 관계 속에 EU 및 아프리카의 이중시민권을 지니고 각국에 상주하고 있는 유럽 백인들을 통해 아프리카 정세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 관리자 또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 중
- 비록 EU 조상들이 아프리카에 남긴 식민통치, 노예무역 등 부정적 역사가 비난받고 있지만, 아프리카 지식층은 EU가 그들의 우방으로 21세기 떠오르는 아프리카를 있게 한 지원자라는 사실을 인식
- 2005년 Gleneagles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앞장서 201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2004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매년 250억 달러씩 지원)하고 아프리카가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기로 합의
- 한편, EU는 2005년 12월에 '아프리카에 대한 EU 전략(EU Strategy for Africa)'을 채택, 2005년까지 170억 유로를 지원했던 원조액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250억 유로씩 지원기로 합의

## 2. 미 국

- 미국은 풀브라이트, 험프리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매년 1,000명 가량의 아프리카 우수인력을 교육시키고 있음
- 그러나 민감한 정치적 조건과 상업적 이해에 바탕을 둔 경제지원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시 정부의 편향적 이스라엘 지원,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아랍국가에 대한 공격 등으로 미국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못한 면도 있음

- 미국은 2004년까지 매년 양자간 원조의 25.8%인 42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원조했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각국의 경쟁적 지원확대에 발맞춰 원조 규모를 2배로 증대할 계획임
- 미국무역개발청은 1981년부터 2005년까지 남부 아프리카에 9,000만 달러를 투입해 10억 달러 이상의 장비, 인력, 물자 등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미국은 2004년에 남부 아프리카 관세연맹(SACU) 회원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했으나 남아공의 반대로 좌절되었음
  - 그러나 2006년 12월에 제안한 투자무역협정은 체결하기로 합의된 상태

### 3. 일 본

- 일본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를 지원했고, 2005년 4월에 열린 아프리카정상회의에서 “경제 원조를 3년 내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또한 2006년 G8 재정장관회의에서는 아프리카국가들의 채무를 탕감하고 아프리카은행에 대한 차관을 매년 2억 달러씩 제공하기로 함
- 일본은 국내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광물자원개발과 일본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아프리카의 정부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기반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시행중

### 4. 인 도

- 인도는 역사적 관계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의 경제관계가 긴밀함

- 인도는 남아공 더반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약 200만 명의 인도인들이 흑인들과 형성한 정치 및 경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농업, 유통업, 광업, 언론매체 등의 분야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인도-NEPAD<sup>2)</sup>', 'Focus Africa' 등의 협력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5. 중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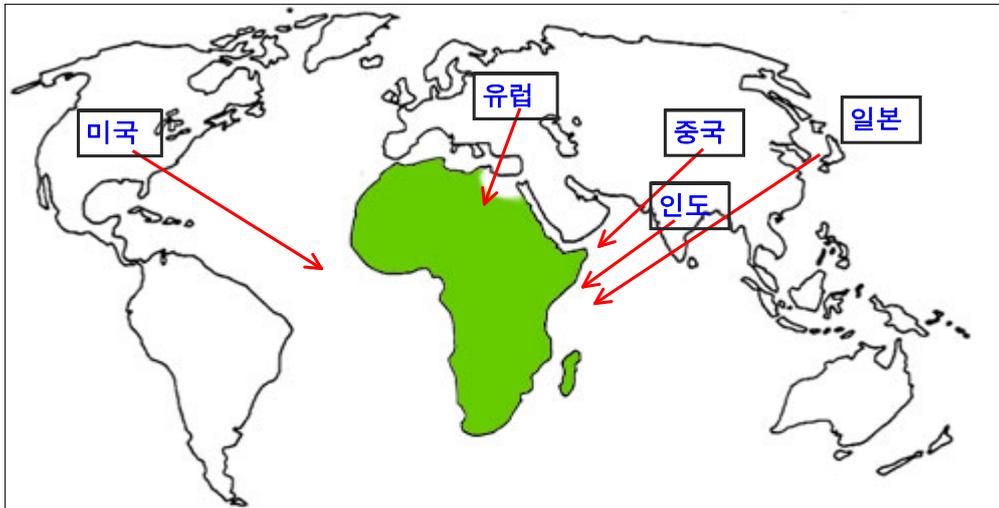
- 중동은 고대부터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프리카와 긴밀한 교류가 형성되어 왔음
- 특히,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교가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부 아프리카에 있어서도 이슬람교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어 기독교계를 긴장시키고 있음
- 중동은 고대부터 유지해 온 종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상권을 확장하고, 석유 수출을 지렛대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임
- 특히, 2001년 9·11사태로 미국 투자가 막힌 중동 오일머니는 남아공 부동산 가격을 지난 3~4년 사이에 2~3배로 폭등시키는 자금원이 되었음

2)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알제리, 남아공, 이집트,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5개국의 주도하에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2001년 7월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일종의 아프리카 부흥계획으로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발전, 아프리카의 세계경제에의 편입, 여성권익신장 등을 주요 목표로 함

### <참 고>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접근 전략

< 미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식민지론' 제기</li> <li>• 아프리카에 새롭게 접근 (원조대상국 ⇨ 경제협력파트너)</li> <li>•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대체 석유 시장으로 아프리카 접근 (아프리카 석유의 도입 비중 목표: 15% (2005년) ⇨ 25% (2015년))</li> <li>• 2010년까지 ODA 증액</li> </ul>

< 유 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체결, 원조확대 등을 통한 관계 공고화 (중국·미국의 아프리카 접근 강화로 기득권 약화 우려)</li> <li>• EU의 '아프리카 대한 EU 전략' 채택 (2005. 12): 매년 170억 유로씩 지원되던 대 아프리카 원조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50억 유로씩 지원하기로 함</li> </ul>



< 중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의 외채탕감 및 개발원조 지원</li> <li>• 정상방문 및 대규모 협력 포럼 등을 통한 파상적인 외교공세</li> <li>• 자원 패권주의가 덜한 신흥산유국(양골라, 수단 등)으로의 접근 강화</li> </ul>

< 일 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획득 등 정치적 의도</li> <li>• TICAD회의(협력포럼) 등을 통한 아프리카 개발문제 접근</li> <li>•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정책' 발표(2007년까지 ODA 배증)</li> <li>•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시장 집중화</li> </ul>

< 인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적 관계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경제관계 긴밀화</li> <li>• '인도-NEPAD', 'Focus Africa' 등의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지원 확대</li> <li>•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li> </ul>

참조: TICAD는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의 약어임.  
자료: 박영호, 아프리카 경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IV.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에 대한 국제적 인식

### 1. 긍정적 시각

- 투자규모 확대, 에너지 확보 뿐 아니라 원조를 통한 인프라 개발로 아프리카 경제발전 기반확대 기여 등 아프리카 개발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
  - 2000년대 새천년 개발 목표가 발표되면서 선진국들이 원조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필요에 비해 부족한 편인 바, 중국의 대규모 원조는 이러한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것임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기반시설은 내전과 분쟁으로 파괴된 바, 중국의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아프리카의 필요 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06년 9월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아프리카의 비단길 : 중국과 인도의 새로운 경제 지평) 역시 중국과의 경제교류 강화로 아프리카 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중이며, 이는 아프리카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
-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협력 강화는 소수의 1차 생산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모노 컬처형(mono-cultural) 아프리카 경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주력 수출상품인 원유, 광물, 원자재 등 1차 생산품의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
-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독재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무대의 협력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수단, 짐바브웨 등 인권 탄압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으로부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서방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막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대

-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은 “해가 지는 서쪽보다는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것 (Look East!)”이라는 표현을 통해 서방보다 중국에 더욱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냄

## 2. 부정적 시각

- 중국의 급부상은 아프리카의 자원 수출국에게 교역조건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고 있지만, 섬유산업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들에게는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타 개도국들과 달리 천연자원 집약적 산업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제 3의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출경쟁 정도는 약함
  - 그러나, 섬유 및 의류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중국산 상품의 급속한 침투로 산업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섬유산업 붕괴론’ 대두)
    - 남아공의 경우 중국산 의류가 의류시장의 86%를 점유하면서 섬유산업 종사자 수가 10년 전 12만 명에서 현재 5만 명 수준으로 급감
    - 2005년 1월 다자간 섬유협정 폐지 이후, 미국과 유럽 섬유시장에서 중국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직면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무역특혜 효과도 반감되고 있음
- 또한, 민주화, 인권,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은 자원부국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원조를 제공하여 아프리카의 인권과 거버넌스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거버넌스와 인권 향상의 조건이 없는 중국의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당분야에서의 개혁 중단과 심지어는 과거로의 회귀를 방임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중국이 아프리카의 비민주적인 정권에도 원조를 제공함에 따라 수원국의 일반 대중보다는 소수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에게 원조의 혜택이 제한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

- 한편, 타 선진원조공여국들은 중국의 무분별한 아프리카 진출이 수출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수출촉진 목적의 원조자금 공여에 따른 무역질서 왜곡, HIPC국의 채무 탕감능력 회복 저해,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개발노력과의 부조화 등을 지적

## V. 중국 등 주요 원조공여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따른 시사점

- 중국의 무분별한 원조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 국제원조사회는 OECD를 중심으로 신흥 원조공여국들(중국, 인도 등)을 국제규범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OECD는 OECD 회원국이지만 DAC 비회원국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DAC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협력을 강화(inreach strategy)해 나가는 한편,
  - OECD 비회원국인 신흥 원조공여국들에 대해서는 수출신용협약을 채택하도록 하여 수출신용 및 원조에 의한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하려는 노력(outreach strategy)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수출시장에서 점점 경쟁이 격해지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 원조공여국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올해 9월 초 OECD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 2차 Non-DAC 공여국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 등 신흥 원조공여국들을 국제규범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한 바 있음

- 주요 원조공여국이 창설한 TICAD, AGOA 등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체의 원조 효과성 제고와 교역 확대 노력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려
  - 1991년 유엔총회에서 일본정부의 제안에 의해 발족된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는 ‘단순한 ODA의 확대보다는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인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 보유
  - 미국의 경우, 1998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에 이어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했으며, 1998년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을 채택하고 모로코, 이집트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 중
  - KOAFEC<sup>3)</sup> 등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협력 노력이 실제적으로 유상원조 규모 확대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대한 KOAFEC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인프라, IT, 지식공유 및 인력개발분야에서 적정 사업 발굴 노력을 적극 확대
- 아프리카와 우리나라가 상호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경제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이룩한 한국이 아프리카 신흥시장(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원조확대를 통해 개발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한다면, 타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개척 또는 상기 신흥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개발경험의 2차 전수도 가능할 것임
    -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수원국으로서의 경험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으로 인해 보다 생생한 개발경험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 Ministerial Conference on Korea-Africa Economic Cooperation의 약자(‘장관급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를 의미. 동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정부 앞 3개 사항을 요청하였음 1) KOAFEC 격년 정례화, 2) 4대 중점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방안(Action Plan) 수립, 3) KOAFEC 자문단 구성. 이에 2006년 12월,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정보원, KDA, 산업인력공단 등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이 Kick-Off Meeting에 참석하여 Action Plan을 마련하여 시행중 임. 자세한 사항은 <http://www.koafec.org/en/main.jsp> 참조

- 이에 따라, 단기간에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모델과 경험은 수원국의 개발계획 수립과 원조공여국의 원조형태 결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 과거 유상차관을 받아 주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인프라 건설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모델은 유상원조를 활용한 경제개발의 성공사례로 활용 가능
  -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 값싼 인력, 엄청난 잠재시장 등을 우리나라의 빈곤극복 경험, IT 등 산업기술 등과 교환하기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간 정례적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 원조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대 아프리카 원조현황을 이해함에 있어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배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이 경제·개발협력에 대한 접근방식 및 전략과 깊이 연관됨을 주지하고, 역사적인 배경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아프리카 역사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아프리카 학교(가칭)’ 설립 등
  - 한편, 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포럼(가칭)’ 등 유상원조기관, 무상원조기관, NGO, 학계 등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원조전략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장 마련 등

- 자 료 : 1. ‘아프리카 경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민경제 자문회의 앞 제출된 용역보고서)
2. ‘한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기회와 EDCF 운용전략’ (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 한국수출입은행의 발주를 받아 제출한 용역보고서)
3. 2006년 국제 ODA 동향 3호 주요토픽 (신흥원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시사점)
4. <http://www.koafec.org/en/main.jsp>

작 성 : 김 성 욱, [swkim@koreaexim.go.kr](mailto:swkim@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토픽 2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ADB의 이주정책 및 시사점

### 【요약】

- 1980년대 이후 국제원조기관은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주정책을 수립·시행해 옴
  - 특히, ADB는 1995년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고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이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정책을 수립
- 2008년부터 원조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증가가 예상되는 우리나라도 향후 합리적인 이주정책을 수립하여 이주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

### I. 주요 원조기관의 이주정책 수립 및 이주 운영 경험

- 1980년대 이후 세계은행, IDB, ADB 등의 국제개발원조기관은 개발사업에서 수반되는 비자발적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사회, 환경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이주정책을 수립·시행
  - 국제개발원조기관들은 이주문제에 관한 경감대책이 없는 개발사업 추진 시,
    - i) 이주민들의 생산시스템 붕괴, 즉 생산자산(소득원)을 상실하고 생산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빈곤에 직면하게 되고,
    - ii) 기존의 공동체 및 사회조직, 문화적 동일성, 전통적 권위, 상부상조 체계가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환경에 처하여 정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주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 세계은행은 이주정책을 공식화한 최초의 국제개발원조기관으로 1980년 2월 운영매뉴얼(Operational Manual Statement), 1990년 6월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 발간 등을 통해 비자발적인 이주에 대한 세계은행의 정책목적, 차주의 이주대책, 이주문제에 대한 세계은행 직원의 검토절차 등의 지침을 제공
  - 1990년대 들어서 많은 다자 및 양자간 원조기관이 세계은행과 유사한 이주정책 및 지침을 채택함
    - 미주개발은행(IDB)이 1990년에 일련의 이주지침을 채택한 데 이어 1991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17개 회원국은 공동이주지침을 승인하여 자국의 원조기관들이 채택토록 함
    - 또한, 영국의 해외개발청은 세계은행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일본국제협력단도 세계은행의 조언을 받아 이주지침을 준비
  - 1995년 이주정책을 채택한 ADB는 비자발적 이주를 프로젝트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대처해야 하는 프로젝트 설계의 절대 구성요소로 간주
- 세계은행은 1986~1993년 지원된 프로젝트의 비자발적 이주 운영 경험에 대해 분석
- 세계은행이 지원중인 1,900개의 프로젝트 중 8% 미만인 146개 프로젝트만이 비자발적 이주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약 2백만 명의 이주민을 발생시킴
  - 적절한 이주는 이주대상 주민들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구축하여 빈곤감소에 기여
    - 부적절한 이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저항 유발, 정치적 긴장 고조, 프로젝트 지연 등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한 이주 시 발생하는 비용을 훨씬 상회할 수 있다고 봄
  - 이주 성공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i) 법률, 정책, 자원할당 형식의 차주의 정치적 약속, ii) 확립된 지침, 시행절차에의 충실, iii) 올바른 사회 분석, 신뢰할만한 인구통계 평가, 개발 지향적 이주 계획수립, iv) 신뢰할만한 비용추정 및 필요자금 제공, v) 효율적인 사업실시기관, vi) 이주목표 설정, 해결책 탐구 및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등을 제시

## II. ADB의 이주정책 (Policy on Involuntary Resettlement)

### 1. ADB 이주정책 특징

#### 가. 세계은행 이주정책 원용

- ADB는 1995년 이주정책 수립 이전 세계은행의 비자발적 이주 운영지침 등을 적용
- ADB와 개도국, 타기관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립된 ADB 이주정책은 특히 세계은행의 이주 운영지침에 크게 의존
  - 아시아 지역에서 ADB와 세계은행의 활동이 유사하고 세계은행의 경우 1980년부터 비자발적 이주 정책을 수립·시행해 온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임

#### 나. 프로젝트 단계별 이주관련 조치

- 프로젝트 설계의 초기단계부터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시까지 프로젝트 단계별로 이주관련 조치를 취함
  - 초기사회평가(Initial Social Assessment) 단계 : 이주계획의 범위 및 필요 자원을 결정
  - 사업준비 기술지원(Project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타당성 조사 단계 : 이주계획(Resettlement Plan) 작성
  - 경영검토회의(Management Review Meeting) 단계 : 이주계획 검토
  - 심사(Appraisal) 단계 : 이주계획 확정
  - 차관협상(Loan Negotiations) 단계 : 이주 보상 문제 협상
  - 시행(Implementation) : 이주계획 추진 감독
  - 모니터링 및 평가 : 이주계획에 모니터링 및 평가 포함

#### 다. 공정한 보상(fair compensation) 제공

- 이주민들에게 이주 후에도 종전의 삶의 수준을 보장해 주는 보상 제 공을 원칙으로 함
  - 상실자산과 소득에 대한 보상, 이주비 지원, 재정착 및 생계회복 지원을 통해 이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회복을 추구
- 이주민들이 상실된 소득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제공
  - 토지취득 시 현금보상은 거래비용을 포함한 시가보상이 아닌 경우 불충 분하게 되고 이주민들이 빨리 소진하여 빈곤해지거나, 가장에게만 지급 되어 여성과 자녀의 생계가 충족되지 않는 위험이 있음
  - 토지기반의 이주프로그램이 토지 이외의 방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거나, 대토 (代土)가 불충분한 경우 소득창출 및 재교육 제도 등의 적절한 대안 제공

## 2. ADB 이주정책 목표 및 원칙

### 가. 이주정책 근거

- 종전에는 개발로 인한 주민이주를 공익을 위해 일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희생으로 여겼으며, 이주프로그램은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하는 토 지에 대한 법령상의 금전보상과 이주부지 개발로 한정
- 그러나, 주민이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혜택 감소, 부정적인 경제·사 회·환경적 영향 등으로 이주를 개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부적절 한 이주관리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못하고 적절한 이주비용을 제공할 때 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함을 인정
- 프로젝트의 질과 장기효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주민과 이주민 복 지에 초점을 두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계획·시행을 개선하고, 개발을 경제·사회·환경적으로도 유익하게 함으로써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목표를 충족

## 나. 이주정책 목표 및 원칙

- 가능한 한 비자발적인 이주를 피하고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찾아 이주를 최소화하며, 이주민의 경제, 사회적 미래가 사업시행 이전보다 유리하도록 보상 및 지원을 제공
- 이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이주 및 보상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 이주민 및 이주수용자 사회문화단체를 지원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이주민이 이주수용 공동체에 경제·사회적으로 통합되도록 함
- 일부 이주민에게 법률상의 토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보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며 여성가장, 토착민, 소수인종과 같은 취약계층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상태를 개선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
- 비자발적인 이주는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구성하여 추진하며 이주 및 보상비용을 프로젝트 비용 및 혜택에 포함
- 이주 및 보상비는 ADB 프로젝트 차관에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단, 토지취득비용 제외)

## 3. 이주계획 (Resettlement Plan)

### 가. 이주계획 수립 기준

- 이주계획은 이주전략, 목표, 수급권(entitlements), 행동, 책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제시한 행동계획으로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행동별 시한이 설정되어야 함
- 이주계획은 이주문제가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필요
  - 이주문제는 집, 공동체, 경작지, 영업자산, 문화유적, 사회구조, 문화적 동일성, 상호지원체계 등 물리적/비물리적 자산의 상실

- 이주에 투입되는 자원, 시간, 노력은 이주로 발생하는 충격과 비례해야 함
  - 이주규모가 작은 단순 프로젝트는 2~4주간 현지 컨설턴트를 투입하여 이주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나, 이주규모가 큰 복합 프로젝트는 사업실기 기관 이외에도 약 15개월간 컨설턴트 및 ADB 직원 투입 등이 필요하며 이주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2년여의 시간이 소요

## 나. 정식 이주계획 (full resettlement plan)

- 이주문제가 중요한(significant) 경우 정식 이주계획을 작성토록 함
  - 이주문제가 중요한 경우는 200명 이상이 이주문제를 경험하거나, 100명 이상의 토착민, 여성가장, 빈곤층, 목축민 등의 취약계층이 이주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50명 이상의 수렵채집민이 이주문제를 경험하는 경우임
  - 정식 이주계획에는 i) 목표, 정책, 전략, ii) 조직책임, iii) 공동체 참여 및 이주수용공동체에의 통합, iv) 사회경제조사, v) 분쟁해결제도 및 항소절차를 비롯한 법률제도, vi) 대체부지 발굴 및 선택, vii) 상실자산의 가치 평가 및 보상, viii) 토지소유권, 보유권, 취득, 이전, ix) 교육, 고용, 대출에의 접근, x) 임시수용시설, 인프라, 사회서비스, xi) 환경보호 및 관리, xii) 시행계획, 예산, 모니터링·평가와 이주문제 경감조치 등을 포함
- 개도국 정부(프로젝트 스폰서)의 이주대처 활동을 지원
  - 개도국 법률, 정책, 행정 및 제도 체계 내에서 이주정책목적 및 원칙의 채택 및 추진
  -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개도국의 효율적인 계획 및 이행 능력 구축
  -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거시제도 및 개도국 능력 강화
  - 행동별 시한이 설정되고 예산이 뒷받침된 개도국의 이주계획 작성
  - 개도국 앞 ADB 정책 안내

## 다. 약식 이주계획 (short resettlement plan)

- 이주문제가 중요하지 않은(insignificant) 경우 약식 이주계획을 작성
  - 약식 이주계획에는 i) 이주문제를 겪는 인구 및 손실의 정도, ii) 정책 및 적용되는 법률제도, iii) 자산평가, 보상, 이주, 정착, 환경보호를 위한 준비활동, iv) 수급권 전달 및 감시 책임, v) 비용, vi) 토지취득 및 이주대책 실시일정, vii) 이주민을 위한 상담 및 불만 해결 장치 등을 포함

## 4. 개도국의 이주정책 조정 및 개발

### 가. 개도국별 상이한 정책 환경 및 이주정책 조정

- 개도국은 법률, 정책, 지침 등의 방식으로 고유의 역사, 사회, 경제적 요인이 반영된 토지수용 및 규율제도를 보유
  - 토지집단 농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이주민들은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토지보상은 보통 공동체에 지급됨
- 개도국의 이주보상 대상, 보상 범위 등의 정책이 ADB 정책과 다른 경우 사업준비 단계에서 사업별로 조정
  - 개도국 법률은 소작인, 노임근로자, 불법점유자, 토착민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ADB는 자산의 공식소유권이 없더라도 보상 대상에 포함
  - 많은 개도국이 이주 후의 생계 및 생활수준을 회복시키는 대책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갖고 있지 않으나 ADB는 보상 범위에 포함

### 나. 개도국 이주정책 개발

- 개도국에 보상자격, 수급권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이 없거나 사업준비 단계에서 기존 정책의 평가 결과, ADB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보상 자격 및 수급권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도국의 이주정책을 개발

## 5. 이해관계자 협의 및 참여

### 가. 필요성

- 이주민들은 이주로 인해 자신들이 생계 및 공동체를 잃고 수급권 관련 복잡한 협상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나 이주계획 및 관리에 참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에 참가
- 협의 없는 이주 추진은 부적절한 전략을 세워 궁극적으로는 빈곤화로 연결되고 이주민들의 프로젝트 반대, 사회분열, 목표달성 지연, 비용증가 등을 유발하여 프로젝트와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 협의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의 반대가 건설적인 참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사업 준비 초기단계부터 협의과정을 시작

### 나. 이해관계자 파악

- 협의 및 참여 계획 개발의 첫 단계로서 1·2차 이해관계자를 파악
  - 1차 이해관계자는 이주민, 프로젝트 수혜자, 이주계획 부지의 이주수용자, 사업실시기관
  - 2차 이해관계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서 지방 혹은 중앙정부, 정책입안자, 지지단체, 선출공무원, NGO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의사소통은 이주영향 평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이주민에게 적합한 대안 개발을 촉진하며 이주민과 수혜자는 프로젝트 설계, 계획 및 추진에 영향을 주고 기여하게 됨

### 다. 참여 방법

- 정보 공유, 이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프로젝트 과업, 위원회 및 의사결정시 이주민의 능동적인 참가를 통해 참여 유도

- 보통 정보부족이나 잘못된 정보로 프로젝트 반대가 발생하므로 프로젝트 발굴단계에서 프로젝트 계획, 설계, 대안, 영향 등을 공유하고 보상정책, 지급계획, 이주계획, 이주예정부지, 시행기관, 일정표, 불만처리절차 관련 정보 제공
- 프로젝트 각 진행 단계에서 이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프로젝트 설계와 이주계획에 반영
- 다양한 이해관계자 단체 대표, 특히 이주민과 NGO를 프로젝트 과업, 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중요

#### 칼리 간다키 'A'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서의 협의 및 참여 사례

- 본 사업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동쪽 200km 지점에 댐과 발전소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00 ha의 토지를 취득
- 이주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영향 평가 시 1,033가구의 이주민을 617가구로 줄였으며,
- 1994년 사업부지에서 최초의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한 이래로 사업실시기관이 사업부지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 수행
- 1996년 **프로젝트정보센터**가 카트만두와 사업부지에 세워지고 전담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정보제공 업무 담당
- 각 마을에 **비공식적 단체**가 세워져 협상촉진, 이주 및 토지취득관련 민원 처리 기능을 수행
- 이들 단체는 사업실시기관에 의해 마을자문단체로 인정받았으며 프로젝트관련 상호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이주민과 사업실시기관간의 의사소통 매개로서 역할

## 6. 이주 (Relocation)

### 가. 이주 유형

- 이주 규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이주 방안을 검토하며 이주민과 이주수용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참가토록 함

- 비이주(No relocation)는 최선의 방안이나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인프라 경로 변경 등 본 프로젝트의 대안을 모색하여 이주를 최소화
- 현장이주(On-site relocation)는 이주민 수가 적은 경우, 인구밀도가 낮은 경우, 프로젝트 사업부지가 작고 분산된 경우 등에 가능. 이주민이 불필요한 현장부지의 일부 점유가 가능하고, 이주민의 이동거리가 짧아 이주 충격이 제한됨
- 자율이주(Self-relocation)는 이주민들이 경제적 요인(직장, 저렴한 토지 획득) 혹은 사회적 요인(혈족관계)에 의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주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주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이전의 생활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혹은 구직활동 지원이 제한됨
- 이주민들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실시기관 선택부지로의 이주는, 특히 이주수용지의 환경, 경제·생계방식과 사회·문화 유형이 다른 경우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함

## 나. 이주부지 선택

- 이주부지의 위치와 질은 궁극적으로 토지, 사회지원조직, 고용, 사업, 대출 및 시장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주계획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
- 환경, 사회, 문화, 경제적 특성이 원래 장소와 유사한 부지를 선택하면 이주 및 소득 회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부지 선택은 타당성 조사 일부로서 검토
- 이주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 생태학적 유사성, 토지가격, 고용, 대출 접근성, 판매, 기타 이주민 및 수용공동체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 기회 관점에서 이주부지의 가능성을 검토

## 다. 이주부지 설계·개발

- 이주부지 설계는 이주민의 문화적 관습 및 내용에 부합해야 하므로 이주민 공동체의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시설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기존의 정착유형을 이해해야 함
  - 이주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누가 다양한 시설 및 사회인프라를 이용하는 지 정착유형 및 시설사용행태 파악
- 주택건설부지 크기는 이전의 주택대지 크기와 신규부지에서의 필요성에 근거해야 하며 이주민에게 미리 건설된 수용시설을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의 집 건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 주거 및 사회인프라는 이주를 요청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이주부지 개발 시 이주민 조직 및 공동체 협회와 협의해야 함

## 라. 이주수용자와의 조화

- 이주는 고용, 공유재산 사용, 천연자원 혹은 사회서비스 압박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이주수용 공동체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주시행기관이 이주민만 지원하는 경우 이주민과 이주수용자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주부지의 인프라와 지원서비스는 이주수용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주수용자는 경제개발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이주민과 함께 참가 가능
- 이주수용자는 비보상적 수급권 배급에 있어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되며 교육, 고용, 기타 프로젝트 혜택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음

## Ⅲ. 시사점 및 의의

-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주문제는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충격이 크므로 국제개발원조기관들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접근하고 있음

-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이주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시위, 정치적 갈등,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이 어려우며,
  - 또한, 피해주민들의 빈곤이 심화됨으로써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주요 목적인 빈곤퇴치 달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 이에 국제개발원조기관들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이주계획 수립과 취업·교육 등의 이주민의 정착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
- 특히, 이주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이주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ADB의 노력은 원조공여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1995년 ADB는 세계은행의 이주 운영지침 등을 원용하여 가능한 비자발적 이주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이주민의 경제, 사회적 미래를 프로젝트가 없을 때만큼 유리하도록 보상 및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정책을 수립
  - ADB는 이주문제가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이주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200명 이상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정식 이주계획을 작성토록 함. 또한, 이주부지 선택 시 생태학적 유사성, 토지가격, 고용, 대출 접근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이주와 소득회복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
  - ADB는 프로젝트 발굴 초기에 이주계획 범위 및 필요자원 결정부터 시작하여, 이주계획 작성·확정, 이주보장 협상, 이주계획추진 감시, 평가 등 프로젝트 단계마다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주정책을 실천해감
- 우리나라도 향후 합리적인 이주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개도국 개발사업의 이주문제 해결 지원 필요

- 보상대상, 범위, 절차 등 개도국의 이주대책이 불충분하더라도 원조기관이 합리적인 이주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함으로써 이주문제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2008년부터 크게 확대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많은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댐, 철도 등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자 료 : [www.adb.org/Documents/Handbooks/Resettlement/Handbook\\_on\\_Resettlement.pdf](http://www.adb.org/Documents/Handbooks/Resettlement/Handbook_on_Resettlement.pdf)

작 성 : 박 봉 균, [pbkl11@koreaexim.go.kr](mailto:pbkl11@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단신 1

## EDCF 설립 20주년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 개최 배경

- 우리나라의 유상차관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선진원조기관과의 교류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노력을 국제원조사회에 널리 홍보
- 국제개발금융기구(MDB) 등 선진원조기관과 개발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
- 국제원조사회의 원조 효과성 제고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선진원조기관과의 공동협력 방안 모색

### 2. 컨퍼런스 개요

-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이란 주제로 EDCF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7. 7. 4(수),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 기조연설 : Lawrence Greenwood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 주제발표 : James Adams 세계은행 부총재, Hiroto Arakawa 일본국제협력은행 이사,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Uwe Ohls 독일부흥금융금고 이사, Pierre Jacquet 프랑스개발청 이사 등
- 참석자 : 주한외교사절, 정부, 업계, NGO, 기자 등 190여명

### 3. 컨퍼런스 주요 내용

#### □ 제 1세션 : 개발경험 및 지식의 공유

##### ○ 발표자 : James Adams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

- 공여국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의 필요성 및 2006년 OECD와 공동 실시한 파리선언의 5대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세계은행 그룹차원에서 원조효과성 달성을 위한 정책과 동아시아에서의 조화 및 연계와 관련된 추진 사례를 설명

##### ○ 발표자 : Hiroto Arakawa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이사

- 일본 ODA는 높은 유상원조 비중이 주요 특징임을 지적하고 JBIC의 그간 동아시아에 대한 지원은 유상원조를 통한 인프라개발에 치중해 왔으며 이는 민간부문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강조
- 또한, 현재 JBIC은 전통적인 인프라 지원뿐 아니라 예산지원(Budget Support)을 통한 정책 및 제도 개혁(Policy & Institutional Reform)도 중시해 왔음

##### ○ 발표자 :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이룩한 국가로 향후 파리선언의 정신에 입각, 수원국 중심의 정책 수립 등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조

#### □ 제 2세션 :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

##### ○ 발표자 : Kazu Sakai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장

- 원조사업 수행시 수원국 중심의 원조전략 수립, 프로그램 방식의 원조제공 등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ADB의 원조 효과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관리 지원 방안을 소개

##### ○ 발표자 : Uwe Ohls 독일부흥금융금고(KfW) 이사

- KfW의 심사기법(리스크관리 등) 및 사후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프로그램 방식의 원조가 효과적이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전통적인 프로젝트 방식의 원조 역할을 강조

□ 제 3세션 : 개발원조기관간 공동협력 방향

○ 발표자 : Camille Gaskin-Reyes 미주개발은행(IDB) 국장

-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해 수원국과 공여국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설명하고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IDB 그룹차원(Corporate Level), 수원국 차원(Country Level), 사업집행 차원(Operational Level)에서의 정책방향 및 내용을 제시

○ 발표자 : Pierre Jacquet 프랑스개발청(AFD) 이사

- AFD의 지원목표(빈곤감축, 경제성장, 공공이익 추구 등) 및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 지원목표 및 수단의 다양화, 신흥공여국의 등장 등으로 인한 원조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ODA의 역할 변화에 대해 설명

□ 개도국 채무관리를 위한 개발원조기관의 공동선언 선포식

○ 참여기관 : 한국수출입은행(한국), AFD(프랑스), JBIC(일본), KfW(독일), NEDA\*(태국)

\* Neighbour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태국경제개발협력청)

- 유상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단순한 자금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보다 새로운 원조지원 방식을 모색

#### 4. 시사점 및 의의

- 우리나라 유상차관 기금인 EDCF의 과거 20년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됨

- EDCF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을 위해 추진해 온 차관사업의 성과를 되새겨 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상차관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데 유익한 자리가 됨
  - 특히, 주한외교사절, 업계,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EDCF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경청할 수 있었음
  
- 국제개발금융기구, 주요 양자간원조기관 등 선진원조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국제원조사회의 최대 화두인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라는 주제로 양자 및 다자 개발원조기관의 유력 인사를 초빙, 향후 이들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개도국 채무관리를 위한 개발원조기관의 공동선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상원조기관의 위상을 높임
  -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구가 추진 중인 개도국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에 AFD, JBIC, KfW 등 선진 원조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유상원조기관의 위상을 제고
  - 또한, 공동선언을 통해 유상원조를 취급하는 원조기관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유상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의 계기를 마련

작 성 : 오 정 태, [jtoh@koreaexim.go.kr](mailto:jtoh@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단신 2**

**JBIC, FY2007 1사분기(4~6월) 업무실적 발표**

□ 일본 JBIC은 최근 2007 회계연도 1사분기(4~6월)의 업무실적을 발표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 총 37건(6,413억 엔)을 승인

\* 전년 동기 실적(52건: 5,159억 엔) 대비 지원 금액 25% 증가

○ 국제금융 부문은 대출 24건(4,010억 엔), 보증 11건(2,174억 엔)을 승인

- 대출 : 필리핀 민자발전소(IPP) 인수를 위한 해외사업금융, 카자흐스탄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한 자원개발금융, 남부 아프리카 지역 현지 산업 및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금융(언타이드 론) 등

- 보증 : 필리핀 민자발전사업 인수, 남부 아프리카 지역 해외투자사업 등에 필요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

○ 해외경제협력 부문은 총 2건(229억 엔)의 엔 차관 사업을 승인

- 부탄 전력사업, 파나마 상수도 사업 등

**JBIC의 최근 5년간 승인액 추이**

(단위 : 억 엔)

부 문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1사분기)
국제금융	대 출	10,599	10,831	9,020	10,678	10,490	4,010
	보 증	3,335	2,409	2,160	2,736	6,038	2,174
	출 자	-	-	22	-	-	-
	소 계	13,934	13,240	11,202	13,414	16,528	6,184
해외경제협력	엔 차관	5,531	5,877	7,986	5,698	7,637	229
	해외투융자	5	-	-	-	-	-
	소 계	5,536	5,877	7,986	5,698	7,637	229
합 계		19,470	19,116	19,188	19,112	24,165	5,159

※ JBIC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1~익년도 3.31, 즉 FY2007은 2007.4.1~2008.3.31

- JBIC은 동 기간동안 **7,641억 엔**을 집행하고 5,894억 엔을 회수하여 동 분기 말 **대출잔액(엔 차관 포함)은 19조 3,768억 엔**, **보증잔액은 1조 6,540억 엔**을 기록
- 국제금융 부문의 경우, 총 대출은 집행액 6,721억 엔, 회수액 3,939억 엔, 대출잔액 7조 9,595억 엔을 기록하였고, 보증잔액은 1조 6,540억 엔을 기록
- 해외경제협력 부문은 동 기간 동안 엔 차관 사업에 대해 **920억 엔**을 집행하고 1,955억 엔을 회수하여 1사분기말 **차관잔액은 11조 4,174억 엔**을 기록

**JBIC의 최근 5년간 집행액 추이**

(단위 : 억 엔)

부 문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1사분기)
국제금융	대 출	11,489	11,294	10,287	8,514	10,592	n.a.
	보 증	2,406	2,418	2,872	2,941	5,868	n.a.
	출 자	-	-	1	3	4	n.a.
	소 계	13,895	13,712	13,159	11,458	16,464	6,721
해외경제협력	엔 차관	5,959	6,296	6,597	6,576	6,067	920
	해외투융자	7	3	24	1	1	-
	소 계	5,966	6,299	6,621	6,577	6,068	920
합 계		19,861	20,011	19,780	18,035	22,532	7,641

**JBIC의 최근 5년간 잔액 추이**

(단위 : 억 엔)

부 문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1사분기)
국제금융	대 출	97,607	90,870	84,998	79,111	78,323	79,595
	보 증	6,305	7,457	9,035	10,551	14,924	16,540
	출 자	11	-	1	-	8	-
	소 계	103,923	98,327	94,034	89,662	93,255	96,135
해외경제협력	엔 차관	112,265	113,198	113,359	115,817	113,748	114,174
	해외투융자	1,617	1,592	1,596	-	1,437	-
	소 계	113,882	114,790	114,955	115,817	115,186	114,174
합 계		217,806	213,117	208,989	205,479	208,441	210,309

□ 특히, 2007 회계연도 1사분기 중 이집트 자파라나 풍력 발전사업 지원  
건은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집  
행위원회에 의해 양자간 ODA 사업으로는 최초로 CDM 사업으로 등록됨  
(’07. 6. 22)

\* 동 사업은 2003 회계연도 승인 건(135억 엔)으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동  
쪽으로 220km에 위치한 자파라나 지역에 120MW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임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본 사업으로부터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 배출권 173만 톤 중 139만 톤을 JCF가 매입할 예정

\* JCF(Japan Carbon Fund) : JBIC 및 일본 민간기업 등의 기금출연으로 설립,  
개도국 등의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탄  
소금융사

○ 본 건은 양자간 ODA 지원을 통해 개발된 최초의 CDM 사업으로  
ODA와 CDM의 궁극적 목적인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의 새  
로운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료 : <http://www.jbic.go.jp/english/index.php>

작 성 : 이 종 화, [jhlee@koreaexim.go.kr](mailto:jhlee@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단신 3

## 일본의 구속성 차관(STEP) 지원 동향

- 일본의 유상차관은 대부분 비구속성(untied)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구속성 엔 차관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2007년에는 구속성 차관(STEP)<sup>4)</sup> 규모도 크게 늘려 2006년의 약 2배 규모인 1,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일본 정부는 구속성 차관 확대를 위해서는 OECD 규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현행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르면, 일본 등 협약 참가국은 구속성 차관 공여시 지원조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반면, 중국, 브라질 등 비참가국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바, 지원조건상의 제약 없이 개도국 원조를 시행하고 있어 일본 등 참가국은 원조시장 참여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일본은 아래 두 경우에 한해서는 OECD 수출신용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속성 차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수출신용협약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개도국이 직접 협약 참가국에게 기술 및 차관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 국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개도국이 협약 참가국인 수주 국가에게 차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4) STEP(Special Term for Economic Partnership)은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타이드 조건의 '특별 엔 차관' 종료 이후 일본 정부가 타이드 차관 지속을 위해 2002년 7월 도입한 구속성 차관으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원사업 : 교량 및 터널, 항만, 도시 수해방지시스템 등 일본 기술, 노하우 및 장비가 사용되는 사업
- 지원금액 : 최대 총사업비의 85%
- 지원조건 : 40년 상환(10년 거치), 금리는 OECD 수출신용협약 준수
- 구매방식 : 공급자는 일본기업(단, Joint Venture의 경우 일본기업이 Leading Partner, 하도급자는 국적제한 없음)이되, 계약금액(컨설팅 서비스 제외)의 30% 이상을 일본에서 조달

**2006년 구속성 차관(STEP) 지원사업**

(단위 : 억 엔)

국 가	사 업 명	규 모
베 트 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	208.87
	남북철도교량안전성향상	117.37
튀 니 지	국영TV 방송센터정비	40.75
필 리 핀	파시그~마리키나 하천개수	85.29
인 도 네 시 아	자카르타 도시고속철도	18.69
	국토공간데이터기반정비	63.73
<b>합 계</b>	<b>6건</b>	<b>534.96</b>

**2007년 구속성 차관(STEP) 지원예정사업**

(단위 : 억 엔)

국 가	사 업 명	규 모
베 트 남	넛탄교 건설	미정
	호치민 도시철도건설(연결)	"
	하노이 지하철도	"
스 리 랑 카	고르항 개발	"
몽 골	울란바토르 신공항건설	"
인 도	화물전용철도 건설	"
파 키 스 탄	고속도로 정비	"
케 나	몽바사항 확장	"
인 도 네 시 아	자카르타 도시고속철도(연결)	"
	지열발전소 건설	"
<b>합 계</b>	<b>10건</b>	<b>1,000(목표)</b>

- 최근 일본의 구속성 차관 확대 움직임은 비구속성 차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본 ODA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임
  - 구속성 차관은 수원국의 관리능력 부재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적 진행 등 언타이드 차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본의 선진 기술 및 노하우 활용을 통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함
  - 또한, 구속성 차관은 수원국 국민들이 원조주체를 명확히 인식토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대일본 친밀도를 제고하고 무형의 수익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자 료 : 1. 일본 경제협력통신(The economic cooperation news)  
 2. <http://www.jbic.go.jp/english/oec/standard/rate.php>  
 작 성 : 유 동 희, [ydu\\_yoo@koreaexim.go.kr](mailto:ydu_yoo@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자료

## 2006년도 우리나라 ODA 통계(확정치)의 주요 내용

###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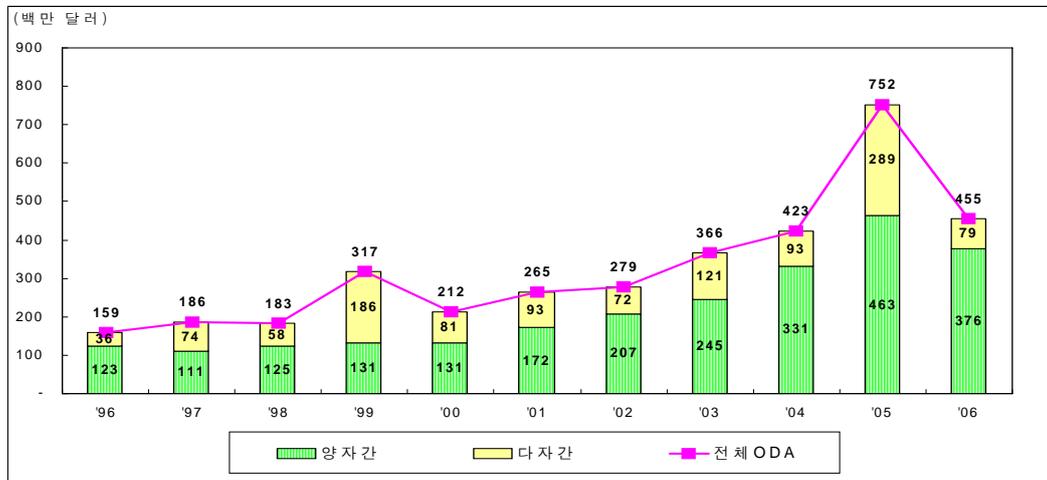
- 2006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순지출 기준)는 전년대비 약 40% 감소한 4억 5,525만 달러로서 국민총소득(GNI)의 0.05%를 기록
- 다자간 원조의 대폭 축소(전년대비 72.6% 감소)가 실적감소의 주 요인
  - 이는 2005년도의 예외적인 증가요인(IDA 및 IDB에 대한 출연·출자금 증가)이 소멸한 것에 기인
- 양자간 원조의 감소(전년대비 18.8% 감소)도 실적감소의 원인
  - 무상원조는 2005년의 일시적 증가요인(이라크 전쟁 및 동남아시아 자연재해)이 소멸되면서 전년대비 19% 감소
  - 양자간 유상원조(EDCF)의 자금 집행부진도 실적감소의 한 요인
- 2006년 ODA 규모는 예외적인 증가를 보인 2005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지만 2004년(4억 2,332만 달러)에 비해서는 소폭(7.5%) 상승

2006년도 우리나라 ODA 공여 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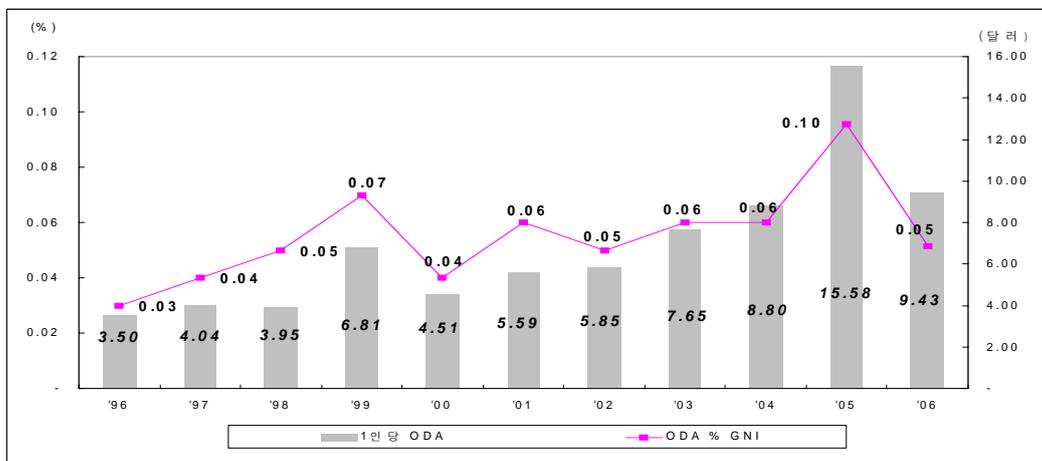
구 성 항 목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중(%)
ODA (A+B)	752.32	455.25	△ 39.5	100.0
양자간 ODA (A)	463.30	376.06	△ 18.8	82.6
무상원조	318.00	258.95	△ 18.6	양자간 중: 68.9
(그중: KOICA)	(201.86)	(193.10)	(△ 4.3)	무상 중: 74.6
유상원조(EDCF)	145.30	117.11	△ 19.4	양자간 중: 31.1
다자간 ODA (B)	289.01	79.19	△ 72.6	17.4
(그중: 한국은행)	(239.90)	(23.04)	(△ 90.4)	다자간 중: 29.1
ODA/GNI(%)	0.095%	0.051%	-	-

###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순지출 기준)



- 양자간 : 다자간 지원비중은 83% : 17%로 전년에 비해 양자간 원조 비중이 21% 포인트 상승
  - 양자간 원조의 절대 규모는 감소했으나 다자간 원조의 대폭 감소가 양자간 원조의 상대적인 비중을 높임
- 2006년도 ODA/GNI 비율은 0.05%, 1인당 ODA는 9.4달러를 기록
  - 2005년도의 예외적인 원조 증가 요인이 소멸함에 따라 예년 수준으로 복귀 - ODA/GNI 비율: 0.095% → 0.051%, 1인당 ODA: 15.6달러 → 9.4달러
  - 2006년도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잠정치)인 0.30%의 1/6수준에 그침

###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 추이 (순지출 기준)



## 2. 원조형태별 ODA 규모 (순지출 기준)

### 원조형태별 ODA 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양자간 원조	무 상 원 조								유 상 원 조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 협력	인도적 지원	NGO 지원	개발인식 증진	행정 비용	기타	프로젝트 원조
376.06	45.55	36.02	116.78	24.37	5.34	2.53	25.31	3.05	117.11
다자간 원조	출 연 · 출 자							양허성 차관	
	UN 기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기타	IMF-PRGF	
		IBRD	기타	ADB/ADF		AfDB/AfDF			
79.19	42.86	0.71	-	40.70		13.21	14.19	△3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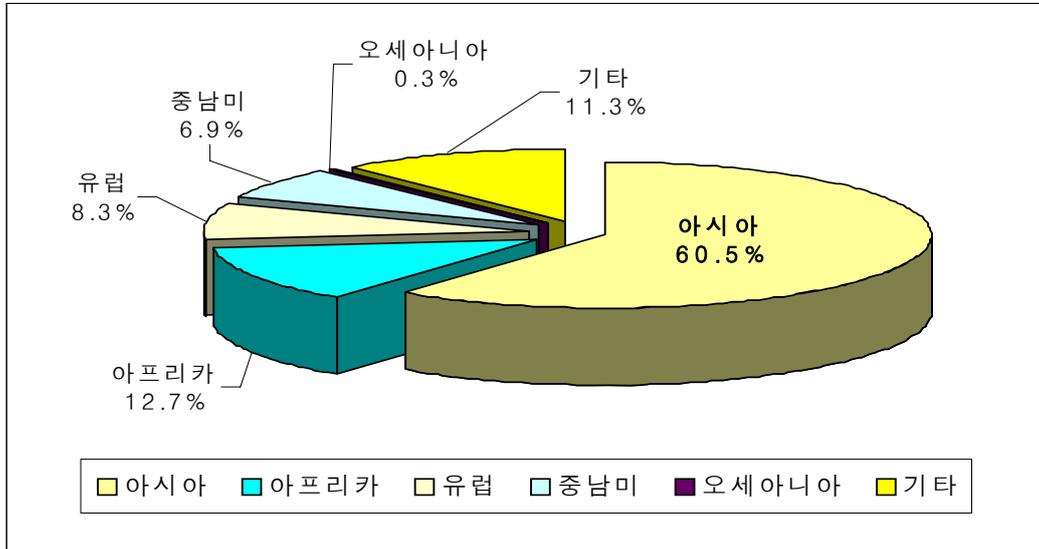
- 양자간 원조는 유·무상 원조의 동반 실적 감소로 전년대비 18.8% 줄어든 3억 7,606만 달러를 기록
  -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약 19% 감소한 2억 5,895만 달러를 기록
    - 2005년에는 중동지역 전쟁과 남아시아 지역의 쓰나미 등 예외적인 사건발생으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이러한 일시적인 증가요인이 소멸하면서 지원규모가 감소
    - 무상원조는 KOICA(1억 9,310만 달러), 정보통신부(1,094만 달러), 교육인적자원부(1,037만 달러) 등 3개 기관(부처)이 82.8%를 차지
  - 유상원조도 전년대비 약 19% 감소한 1억 1,711만 달러를 기록
    - 2006년 EDCF의 경쟁입찰 강화에 따른 구매절차 지연으로 자금집행이 부진한 것이 유상원조 실적감소의 주 요인
    - 다만, 이러한 실적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상원조가 양자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한편, 2006년도 EDCF 약정(승인)액은 3억 5,922만 달러로 전년(3억 1,876만 달러) 대비 12.7% 증가하여, 향후 EDCF 지출실적이 차츰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다자간 원조는 국제금융기구 앞 대규모 출연·출자금이 없어지면서 전년대비 72.6% 감소한 7,919만 달러를 기록
  - 2005년의 IDA 재원보충을 위한 출자금 급증('04년: 4,367만 달러 → '05년: 1억 1,973만 달러 → '06년: 없음), IDB 가입에 따른 출연·출자금 납입(8,120만 달러) 등 일시적인 증가 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감소
    - IMF-PRGF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양허성 차관 잔액(3,248만 달러)의 조기상환도 다자간 원조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 다만, 2007년에는 IDA(7,974만 달러)와 IDB(833만 달러)에 출연·출자금 납입이 약정되어 있어, 이 기구들에 대한 지원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자간 원조는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1억 1,167만 달러,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3,248만 달러(상환액)로 구성
    - 2006년에는 지역개발은행(5,391만 달러) 및 UN 기구(4,286만 달러)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출연·출자의 86.7%를 차지

### 3. 지역별·국가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 양자간 ODA는 60.5%가 아시아에 집중되었으며, 아프리카(12.7%), 유럽(8.3%) 등이 그 뒤를 이음
  - 양자간 ODA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동아시아(36.4%), 중동(31.5%), 남부 및 중앙아시아(31.4%) 등으로 구성
  - 무상원조는 아시아(65.7%)와 아프리카(10.1%)에 중점 지원되었으며, 유상원조는 아시아(49.1%), 유럽(24.8%), 아프리카(18.5%)순으로 지원됨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비중 (순지출 기준)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대양주	기타*	합계
무상원조	170.0	26.1	16.5	2.1	1.8	42.5	259.0
유상원조	57.5	21.7	9.4	29.0	△0.6	-	117.1
합계	227.6	47.8	25.9	31.1	1.2	42.5	376.1

\* 기타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배정되어 배분이 어려운 경우임

- 국가별로는 이라크에 대한 지원이 전체 양자간 ODA의 15.2%(양자간 무상원조의 22.0%)를 차지하였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
- 이라크는 2003년 3월 전쟁발발에 따른 무상원조 증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제일의 ODA 지원 대상국으로 자리 잡음
  - KOICA(4,820만 달러)와 국방부(849만 달러)가 이라크 전체 지원액의 99.3%를 차지
- 상위 10개국에 대한 양자간 ODA 비중은 54.2%로 작년에 비해 18% 포인트 감소함('04년: 74.6% → '05년: 72.2% → '06년: 54.2%)

양자간 ODA의 국가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순위	국 가	무상원조	유상원조	합계	
				금액	비중(%)
1	이라크	57.1	-	57.1	15.2
2	스리랑카	7.4	15.3	22.7	6.0
3	방글라데시	4.1	18.0	22.2	5.9
4	인도네시아	20.3	△1.4	18.9	5.0
5	알바니아	0.0	16.9	16.9	4.5
6	케냐	1.1	14.4	15.5	4.1
7	캄보디아	7.4	6.5	13.8	3.7
8	라오스	5.4	8.2	13.6	3.6
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0.0	12.9	12.9	3.4
10	중국	6.8	3.3	10.2	2.7
상위 10개국 소계		109.6	94.1	203.7	54.2
기타 120개국 소계		104.6	23.0	127.6	33.9
국 별 배 분 불 능		44.7	-	44.7	11.9
총 합계		259.0	117.1	37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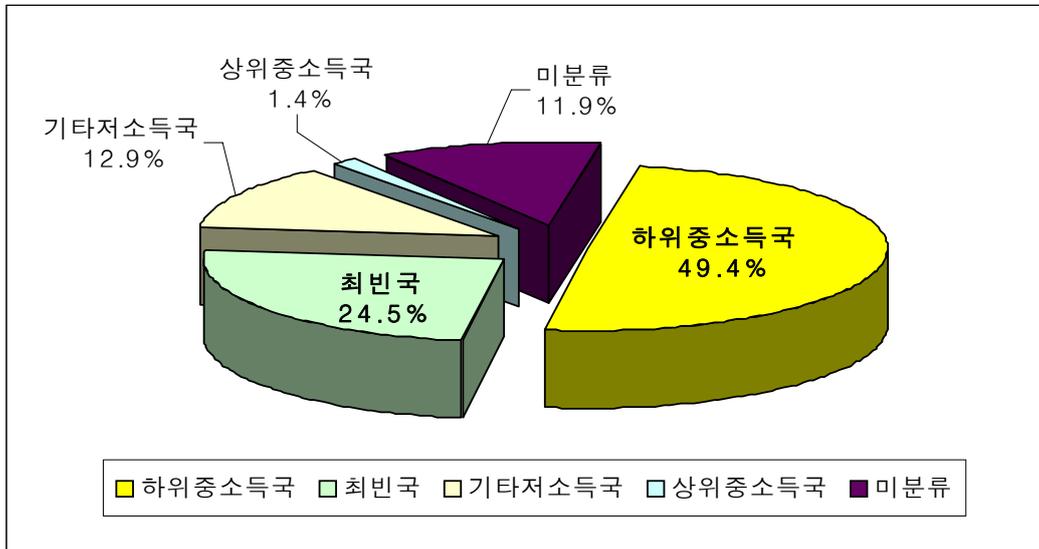
-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LMIC)에 양자간 ODA의 49.4%가 지원되었고 최빈국(LDC)에는 24.5%가 지원됨
  - 전년과 비교하여 최빈국 비중은 비슷하나, 하위중소득국 비중은 7.8% 포인트 감소하고 기타 저소득국비중은 1.5% 포인트 증가함
  - 무상원조는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하위중소득국(53%) 지원비중이 높은 반면, 유상원조는 방글라데시, 라오스, 앙골라 등 최빈국(47%)과 스리랑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등 하위중소득국(41.3%)에 집중됨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최빈국 (UN지정)	기타 저소득국 (1인당 GNI <825달러)	하위 중소득국 (≤3,255달러)	상위 중소득국 (≤10,065달러)	미분류	합계
무상원조	37.1	33.8	137.3	6.0	44.7	259.0
유상원조	55.0	14.5	48.4	△0.8	-	117.1
합 계	92.1	48.3	185.6	5.2	44.7	3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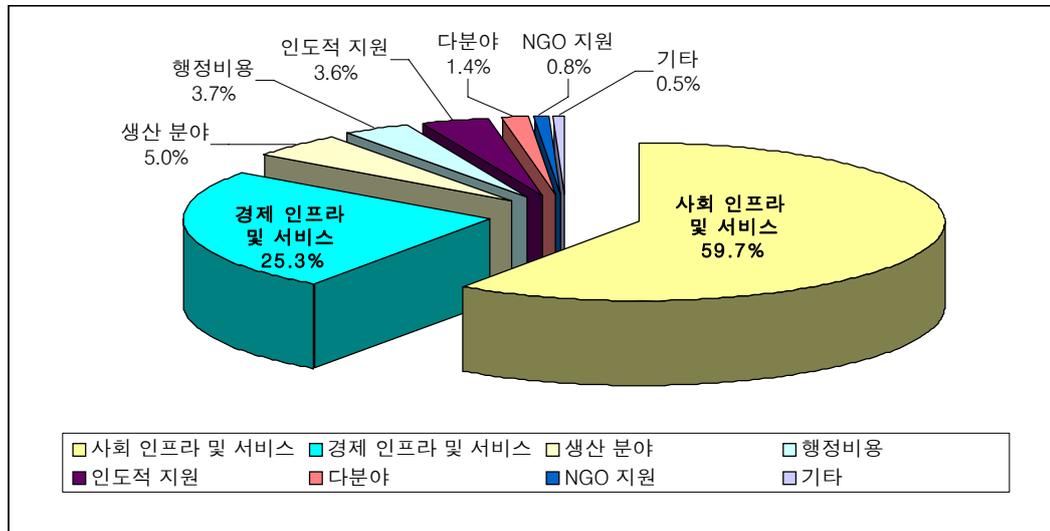
###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비중 (순지출 기준)



#### 4. 분야별 지원규모 (약정 기준)

- 양자간 ODA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59.7%(4억 309만 달러),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는 25.3%(1억 7,095만 달러)를 지원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부문(1억 4,161만 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1억 3,515만 달러), 식수공급 및 위생(8,076만 달러), 보건(3,856만 달러)이 그 뒤를 이음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는 교통 부문(9,954만 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통신(6,525만 달러), 에너지(498만 달러)가 그 다음 순
  - 생산 분야는 산업·광업·건설 부문 등을 중심으로 3,350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인도적 지원에는 2,462만 달러, 행정비용으로는 2,531만 달러가 약정됨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비중 (약정 기준)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규모 (약정 기준)

(백만 달러)

구분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기타	합계
<b>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b>	<b>295.6</b>	<b>30.2</b>	<b>74.3</b>	<b>3.1</b>	<b>403.1</b>
교육	94.9	0.2	40.0	-	135.2
보건	23.2	2.1	13.2	-	38.6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	-	0.5	-	0.5
식수공급 및 위생	79.4	-	1.3	-	80.8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98.0	27.8	12.7	3.1	141.6
기타	-	0.1	6.4	-	6.5
<b>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b>	<b>145.4</b>	<b>0.5</b>	<b>25.0</b>	<b>0.0</b>	<b>170.9</b>
교통	96.3	-	3.3	-	99.5
통신	48.1	0.5	16.7	-	65.2
에너지	1.1	-	3.9	-	5.0
금융 서비스	-	-	0.4	-	0.4
기타	-	-	0.7	-	0.7
<b>생산 분야</b>	<b>8.6</b>	<b>4.5</b>	<b>20.4</b>	<b>-</b>	<b>33.5</b>
농업·임업·수산업	4.6	0.3	6.9	-	11.8
산업·광업·건설	3.9	4.2	9.2	-	17.4
무역 및 관광	0.0	0.0	4.3	-	4.3
<b>다분야</b>	<b>3.3</b>	<b>0.6</b>	<b>5.3</b>	<b>-</b>	<b>9.2</b>
<b>인도적 지원</b>	<b>-</b>	<b>-</b>	<b>-</b>	<b>24.6</b>	<b>24.6</b>
<b>행정비용</b>	<b>-</b>	<b>-</b>	<b>-</b>	<b>25.3</b>	<b>25.3</b>
<b>NGO 지원</b>	<b>-</b>	<b>-</b>	<b>-</b>	<b>5.3</b>	<b>5.3</b>
<b>기타</b>	<b>0.3</b>	<b>0.2</b>	<b>0.5</b>	<b>2.5</b>	<b>3.5</b>
<b>합계</b>	<b>453.1</b>	<b>36.0</b>	<b>125.5</b>	<b>60.8</b>	<b>675.5</b>

작성 : 김태범, [ktb@koreaexim.go.kr](mailto:ktb@koreaexim.go.kr)

목차보기

EDCF 소식

2007년 3/4분기 EDCF 소식

1. 2007년 3/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 라오스 북부도로 개선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라오스 정부 (라오스 통신교통건설부)
- 총 사업비용 : 28.1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2.4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라오스 북서부 4번국도 구간 중 제 I 구간의 포장·개보수 및 메콩다리 건설 등
- 사업 개요
  - ADB의 지역개발 사업인 GMS 개발 프로그램 중 남북부 연결도로의 라오스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006년 11월 라오스 정부가 차관신청서 제출
  - 라오스 북부지역의 물류유통 개선 및 교역증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및 빈곤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탄자니아 말라가라시江 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탄자니아 정부 (탄자니아 도로공사)
- 총 사업비용 : 31.3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5.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말라가라시江에 3개의 교량 및 교량을 중심으로 한 연결도로 건설, 컨설팅서비스 등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탄자니아 정부가 개발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6월 차관신청서 제출
  - 그 동안 탄자니아 경제발전의 직접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던 교통인프라 부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교역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통한 빈곤감축 효과가 기대됨

## □ 인도네시아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바탐산업개발청)
- 총 사업비용 : 20.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6.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바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 IT 센터 건립, 컨설팅 서비스 등
- 사업 개요
  - 인니 정부의 중기개발계획 중 주요 목표인 'e-Government'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06년 9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됨
  - 바탐시에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IT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경쟁력 및 공공서비스 부문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인도네시아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 총 사업비용 : 26.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1.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관련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컨설팅 서비스 등
- 사업 개요
  - IT 분야 인력의 교육 및 육성, 정부·학계·민간 부문간 IT 협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06년 11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본건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IT 정책을 지원하게 될 뿐 아니라, 공무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하여 정보통신 문맹 퇴치 및 응용능력 배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또한, IT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정부 주도의 IT 정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 인도네시아 종합병원개선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인도네시아 정부(인도네시아 보건성)
- 총 사업비용 : 30.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4.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자카르타, 보고르, 반둥, 발리 등 4개 지역 소재 종합병원에 지역 주민의 진료개선에 필요한 의료장비 공급 및 병원 건물 신축 등
- 사업 개요
  - 본건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0 인니보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지원대상 병원들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기기 노후화 및 부족 등으로 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큰 바, 첨단 의료장비를 공급하고 선진 의료기법 등을 보급함으로써 각종 질병 및 빈곤 퇴치와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 □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 (베트남 도로공사)
- 총 사업비용 : 63.1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49.7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베트남 딱까우 선착장 우회도로 건설 및 민루옹~투바이 간 도로개보수 등
- 사업 개요
  - ADB가 추진하고 있는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 개보수 사업의 일부로 2007년 3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됨
  - GMS 국가간 물적·인적 이동을 위한 운송비용 절감, 농촌지역과 지방중심지와의 도로 연결성 제고,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시내 중심지의 소음 및 공해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본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메콩강 지역 국가간의 경제교류 증진을 통한 경제발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 (동나이 상수도건설공사)
- 총 사업비용 : 32.8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6.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동나이성 티엔탄 상수도시설의 규모 증설을 위한 취수·정수 설비 확충, 송·배수관망 확장과 이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등
- 사업개요
  - 베트남 동나이성 내의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티엔탄 정수장(EDCF 1차 지원사업) 설비를 증설하고 추가적인 송배수관망을 구축하는 후속사업으로 2006년 12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본건 사업은 베트남 정부가 1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현대적인 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2차 사업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바, 수원 국내 개발우선순위가 높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본 사업의 지원으로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 베트남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 (투아티엔훤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38.6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0.9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종합병원 건설, 의료기자재 구매, 교육훈련 등
- 사업개요
  - 투아티엔훤성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설하고 의료기자재를 공급하여 베트남 정부의 '2006~2010년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보건의료 부문 개발계획 이행을 지원하기위해 사업으로 2007년 4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보건의료시설이 부족한 투아티엔훤성에 종합병원을 건립,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질병 및 사망에 따른 노동력 상실을 예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캄보디아 지방행정정보망 확충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캄보디아 정부 (국가정보개발원)
- 총 사업비용 : 38.8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1.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주요 도시 및 지방에 행정정보시스템 및 국가통신망 구축, IT 센터 설치, 컨설팅 서비스 등
- 사업개요
  - 캄보디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요 개발목표인 '공공행정 개혁'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11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및 차관공여계약 체결
  - 행정정보시스템 확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 정부정책의 적시 수립,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지방도시에 대한 국가통신망 보급에 따른 정보화 격차 해소, 지역간 균형 발전, 정보통신 개발 촉진 등을 통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 및 빈곤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 EDCF 업무통계 요약 (2007. 9. 30 현재)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승 인*	집 행	기금조성(누계)
2004년	2,429	1,555	16,505
2005년	2,973	1,643	17,586
2006년	3,343	1,361	19,238
2007년(9월말)	1,864	747	19,486

\* 2007. 9. 28자 환율 (₩927.48/U\$)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1개국 158개 사업, 2조 8,198억 원 ('07 : 6개국 7개 사업, 1,864억 원)
- 집행 : 38개국 121개 사업, 1조 6,925억 원 ('07 : 18개국 25개 사업, 747억 원)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누계 (1987~2007. 9)

○ 지역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지 역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18,708	66.4%	11,609	68.6%
유 럽	3,196	11.3%	2,347	13.9%
아 프 리 카	3,074	10.9%	1,677	9.9%
중 남 미	2,128	7.6%	737	4.4%
중 동	943	3.3%	474	2.8%
대 양 주	149	0.5%	82	0.5%
<b>합 계</b>	<b>28,198</b>	<b>100%</b>	<b>16,925</b>	<b>100%</b>

○ 분야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분 야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8,249	29.3%	4,601	27.2%
통 신	3,761	13.3%	3,162	18.7%
에 너 지	2,461	8.7%	2,162	12.8%
수자원, 위생	4,069	14.4%	1,844	10.9%
환 경 보 호	216	0.8%	148	0.9%
보 건	2,817	10.0%	1,720	10.2%
교 육	2,474	8.8%	1,319	7.8%
공 공 행 정	2,337	8.3%	714	4.2%
농 수 입	888	3.1%	571	3.4%
기 타	926	3.3%	684	4.0%
<b>합 계</b>	<b>28,198</b>	<b>100%</b>	<b>16,925</b>	<b>100%</b>

작 성 : 김 태 범, [ktb@koreaexim.go.kr](mailto:ktb@koreaexim.go.kr)

목차보기